

<2025. 09. 11. 기자회견문>

927기후정의행진 전남비상행동 참여선언 기자회견문

“기후정의로 광장을 잇자!”

올 여름도 역대급 폭염과 폭우를 겪었다. 3월 최악의 산불에 이어, 6월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 7월에는 폭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기후위기는 단순한 환경문제와 이상기후 현상이 아닌 재난 그 자체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극심한 폭염속에서 일하다 쓰러지는 노동자와 농민들은 생명을 잃었다. 집과 마을이 물에 잠기고, 산사태가 마을을 덮치는 일들이 일상화 되었다.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는 사람들, 가축과 비인간 동물들, 수 많은 생명이 희생당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여전히 기후위기를 가속화 시키는 경제성장 위주의 국정방향을 내세우고 있다.

기후위기는 성장과 이윤만을 추구하며 온실가스를 배출해 온 자본주의의 결과다. 지금의 기후위기를 야기한 사회경제 시스템을 공고히 해 온 특권층은 여전히 그 수단을 놓지 않고, 일상화된 재난에 눈을 감으며, 오히려 위기조차 이윤추구의 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는 기후위기 불평등을 끝내고 모든 생명이 존엄하게 살아갈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세계적인 기후정의운동의 흐름과 함께한다.

전남비상행동은 기후정의 실현을 요구하는 전남도민을 조직하여 9월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다시 모인다. 탄핵이후 조기대선과 새 정부 출범 일련의 과정에서, 광장에서 터져나왔던 다양한 목소리와 요구는 어느새 묻히고 있다. 불평등이 가져온 불안을 토양삼아 혐오와 차별이 자라고 있고, 기존의 성장주의와 개발주의에 기댄 정치가 득세하고 있다.

새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보다는 AI, 반도체 등 기술중심의 첨단산업에 대한 장밋빛 기대를 앞세워 자본주의 성장을 가속화하려 한다.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고, 노동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는 산업육성이 기후위기 대응이나 인권보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고려는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첨단기술 산업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소형원전개발과 신규원전까지 용인하는 모습을 보인다.

전라남도는 ‘기술 중심’, ‘투자 유치 중심’, ‘대기업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앞세우며, 정작 기후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농민, 어민, 청년, 노동자들은 삶을 지킬 수 있는 정책은 주변부에 머물러 있다. ‘저탄소 농업 인증’ 등 농업정책은 영세 농민은 접근이 어렵고, 기후재난 피해 복구는 개별 농가의 몫으로 떠넘겨지고 있다. 대규모 해상풍력

개발이나 LNG발전, 수소경제 역시 생태계 파괴와 주민을 소외시키고 있다. 더이상 ‘녹색전환’이라는 이름으로 생태계를 파괴하고, 지역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될 것이다. 전라남도는 탄소중립이라는 이름의 ‘화석연료 연장 전략’을 멈추고 기후위기를 가속화 시키는 정책들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막대한 탄소를 배출하는 철강과 석유화학단지에 의존하는 지역경제 구조를 하루빨리 전환하도록 해야 한다. 탄소중립은 단지 기술이나 산업 정책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가야 하는 생존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지구와의 조응을 잊지 않는 방식의 경제구조로, 그 전환의 과정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정의로운 전환’의 방식을 고려해 바뀌어야 한다. 또한 노후화된 고창-영광 한빛핵발전소 1·2호기 수명연장을 중단하고, 기존 노후핵발전소의 송전용량을 재생에너지 쪽으로 전환하는 데에 앞장서야 한다.

기후위기는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다. 기후위기는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진다. 약자에 대한 배려 없는 성장주의를 반성토록 한다. 기후재난의 시대, 우리는 보다 절실히 우리의 권리와 존엄한 삶을 위해 요구할 것이다. 우리의 노동은 자본주의 시스템 속 부품이 아니다. 생태계는 이윤을 위한 착취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이 사회를 바꾸고자 한다. 이윤보다는 생명을 말하고, 개발이 아닌 보호를 말하며, 경쟁보다는 공존과 돌봄으로 세상을 바꾸고자 한다. 우리가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세상을 바꾸는 것이 곧 기후를 바꾸는 길이 되리라는 믿음으로 연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후위기 전남비상행동은 전남의 노동자, 농민, 청소년을 비롯한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를 이뤄 9월 27일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기후정의 행진에 동참하고자 한다.

9월 기후정의행진은 기후정의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이윤과 성장 중심에서 생명과 평등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 광범위한 대중운동으로 기후정의를 위한 사회적 압력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이번 927기후정의행진을 통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전라남도과 기초단체에 기후 시민으로서의 요구를 큰 목소리로 외칠 것이다.

첫째, 전남도와 기초단체는 기후정의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과 목표와 전환 계획을 수립하라.

둘째, 노후화된 고창-영광 한빛핵발전소 1, 2호기 수명연장 중단하고,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실행하라.

셋째 대기업 투자에 의존하고 있는 저탄소 회피전략 재검토, 생태계 파괴 사업 중단하라.

넷째, 모든 생명의 존엄과 기본권 보장, 사회공공성 강화하라

다섯째, 농업재해 대책으로 스마트팜 확대가 아닌 생태농업전환 계획 수립하고, 먹거리 기본권 및 농민 생존권을 보장하라.

여섯째, 노조법 개정을 통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차별 없이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

일곱째, 비인간 동물을 상품화하는 공장식 축산을 정의롭게 전환하고 동물 착취 시스템을 철폐하라.

2025. 9. 11.

기후위기 전남비상행동

【연대단체】

(사)전남녹색연합 · (사)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광주전남지부동부지회 · 국성정치하는 엄마들·국성군농민회 · 구례기후행동시민모임 · 국성농민도서관 · 국성농민회 · 골목책방:서성이다·공공운수노조광전본부·공공운수노조광주전남지역본부·공무원노동조합연맹 ·광양YMCA · 광양YWCA · 광양농민회 ·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준) · 금속노조 광전지부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금속노조광전지부 포스코광양지회·지리산과섬진강을사랑하는사람들 · 목포YMCA · 목포YWCA · 민주노동당 ·민주노총전남지역본부 · 민주노총전남지역본부 광양시지부 · 진보당 전남도당 · 진보당광양시위원회 · 소비자기후행동전남 · 순천농민회 · 순천YMCA · 순천YWCA · 순천힐링클럽 · 순천함께그린클럽 · 순천정원클럽 · 순천청년연대 ·순천환경운동연합 · 여수YMCA · 여수YMCA가사리환경교육센터 · 여수YWCA ·영암참교육학부모회 · 전교조순천중등지회 · 전남녹색당 ·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전교조전남지부 ·전남진보연대 · 희망해남21 · 정의당전남도당 · 정의당순천시위원회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양시지회 · 해남YMCA · 화순YMCA · 나주사랑시민회 · 우리마을교육연구소 · 지구벗(고흥) · 항꾸네 협동조합

927기후정의행진 전남비상행동 6대 요구

기후정의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전환 계획을 수립하라.

이재명 정부는 2025년 하반기까지 UN에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해야 하며, 2024년 기후헌법소원 판결을 반영해 2026년 초까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장기 감축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2022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은 2018년 대비 7.6%에 불과해, 2030년 40% 감축 목표조차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2035년 감축목표를 국제적 책임과 기후정의에 입각해 대폭 상향해야 한다. 또한 필요한 만큼의 온실가스감축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를 검토하여 효과적이고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분산되어 있는 조직을 기후위기 문제와 에너지 정책을 함께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전라남도 행정 조직을 개편하라

탈핵·탈화석연료,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실행하라.

이재명 정부가 지난 정부의 핵 정책을 계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탈핵은 더욱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대선에서 2040년 탈석탄을 공약했지만, 이는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더구나 전라남도는 탈석탄 신재생에너지 전환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정의로운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한편 태양광과 해상풍력 분야에 수소경제 등 대자본과 해외기업이 진출하면서, 재생에너지 전환이 민영화와 에너지 주권 상실로 이어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조성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부족 및 일방적 행정 추진으로 지역과 지역민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에너지 정책은 재검토해야 한다. 햇빛과 바람을 전남도민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탈핵·탈화석연료·공공재생에너지를 통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실현해야 한다.

대기업 투자에 의존하고 있는 저탄소 회피전략 재검토, 지역 경제의 이익 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탈탄소 정책마련, 생태계 파괴 사업 중단하라

주민 참여형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형식적 참여에 그치고 수익은 대기업과 외부로 유출되는 구조의 탄소중립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사회·생태적 규제에 대한 논의 없이 추진되는 산업 육성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블루수소 산업은 화석연료 기반에 수소에 CCUS(탄소포집저장) 기술을 결합한 방식으로 이는 탄소를 줄이기보단 탄소발생을 다른 형태로 관리하는 것이다. 탈탄소가 아닌 저탄소 회피

전략을 멈추고, 생태계 훼손으로 타당성이 의문시된다. 흑산도 신공항, 영산강 하굿둑 개방, 지리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신규 댐 등 무분별한 개발과 생태계 파괴를 중단해야 한다.

모든 생명의 존엄과 기본권 보장, 사회공공성 강화하라.

올해 3월, 사상 최악의 산불이 전국을 덮쳐 30명이 넘는 목숨을 앗아가고 수많은 피해를 발생시켰다.

6월 기록적인 폭염으로 일하다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7월 중순의 폭우로도 3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기후재난으로 백만 마리가 넘는 가축이 죽었고, 야생동물의 피해는 집계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기후재난은 불평등의 경로를 따라 확산된다. 농산어촌, 물류창고, 건설현장, 비닐하우스 노동자들, 쪽방 등 취약한 주거 환경에 거주하는 이들과 비인간 동물 모두가 위협받고 있다. 모두에게 안전한 노동권·주거권·건강권·이동권·재생산권 등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동시에 비인간 동물과 자연의 권리를 확립하기 위한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기후위기 시대에서 사회공공성 강화는 모두에게 안전한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가치다.

농업·농민의 지속가능성 보장, 먹거리 기본권 수립하라.

올봄, 전문가조차 처음 목격하는 산불과 한여름 시간당 100mm 폭우는 농민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았다. 농업은 생태친환경농업 전환을 통해 기후위기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농민의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후재해 대응 지원과 함께 농업 보호·육성을 위한 직불금 강화, 기본소득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친환경 논농업 50% 달성, 화학비료와 농약 50% 감축 등 구체적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농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농민기본법을 제정하고, 먹거리 기본법을 통해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를 보장하고 국가·지자체 먹거리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전라남도의 저탄소 농법, 친환경 인증 정책은 일부 대규모 농가나 단체만 참여가 가능하며, 영세농가는 접근조차 어렵다. 가뭄, 폭염, 병해충 피해에 대한 근본 대책을 점검, 농민들의 생존 기반 보호 정책을 강화하라.

비인간 동물을 상품화하는 공장식 축산을 정의롭게 전환하고 동물 착취 시스템을 철폐하라.

공장식 축산은 윤리적, 환경적, 건강적, 경제적 측면에서 지속 불가능하며, 비인간 동물을 심각하게 착취하는 시스템이다. 동물을 감각적 존재로서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이는 인류 자신에게도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하는 길이다. 우리는 공장식 축산의 단계적 철폐와, 동물 착취 없는 단계적 축소, 정의로운 전환을 촉구한다.

927기후정의행진 세부 요구

1. 국제적 책임과 지역간, 세대간 기후정의에 부합하는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전환 계획 수립하라(**2018년 총배출량 대비 67% 이상 감축**)
2. 기후정의에 입각한 개헌 실시하고, 기후헌법 소원 판결에 따라 탄소중립기본법 전면개정하고 **2050년까지의 장기 감축경로** 마련하라
3.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SMR** 개발과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하라
4. 일방적인 송전탑, 양수발전 건설 중단하고, 에너지 수요 감축과 신속한 탈석탄 탈화석연료 계획 수립하라
5. 임박한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사회와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 계획 마련하라
6. 민주주의와 에너지 공공성을 훼손하는 재생에너지 민영화 중단하고, 공공재생에너지로 신속하고 정의롭게 전환하라
7. 에너지와 자원을 과소비하는 **AI**, 반도체 산업 육성과 일방적인 데이터센터와 반도체특별법 추진 중단하고, 지역간 정의와 노동권, 사회·생태적 한계를 고려한 규제와 산업정책을 마련하라
8. 신공항과 **4대강** 사업, 국립공원 케이블카, 신규댐 건설 등 생태계를 파괴하는 무분별한 개발사업 철회하라
9. 당사자가 참여하는 기후재난 대책 마련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노동권, 주거권, 건강권, 재생산권 등 기본권 보장하라
10. 기후위기 속 존엄한 삶을 위해 여성과 소수자, 장애인 차별 철폐하고 공공의료, 공공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및 탈시설 보장하고 돌봄중심 사회로 전환하라
11. 이스라엘 정부는 가자 집단학살 중단하고, 한국 정부는 석유공사의 가자 가스전 사업, 방위산업 육성, 무기 수출을 전면 중단하라
12. 철강, 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고배출 산업에 정의로운 전환 계획 마련하고 일회용품 등의 대량 생산과 폐기 시스템을 멈추고, 대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기후 규제를 강화하라
13. 친환경농업 면적 **30%** 달성, 실효성 있는 농민 지원(농업 재해보험 개선, 직불금 예산 증액, 기본소득 실현 등), 먹거리 기본권과 식량주권을 보장하라

14. 공장식 축산업을 포함해, 자본과 인간의 유흥을 위해 비인간 동물을 상품화하고 수탈하는 생명 착취 산업 시스템을 종식하라

15. 철도, 지하철, 버스 공공성 강화하고, 공공교통과 보행권, 자전거탈 권리 확대로 모두의 이동권 보장하라

16. 입시경쟁 교육을 폐지하고 생태 전환 교육을 강화하며, 기후정의와 공공성에 기반하여 교육 과정과 학교 운영의 대전환에 착수하라

17. 배출 책임과 기후정의에 따른 조세 개혁, 증세로 전환의 재원을 마련하라

18. 한국 정부와 기업은 국제적 기후책임을 다하고, 기후위기 피해국과 민중에 대한 생태부채를 배상하라

기후위기 전담비상행동